

# 업자 멋대로 국비 써버린 '힐링가든'

광주시, 예산 부당 집행 발견 환수조치  
국고지원 사업 사후관리 부실 드러내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육성사업(RIS) 중 하나인 '친환경 기능성 힐링 가든사업'(이하 힐링가든사업) 참여업체가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리 받은 국고를 통해 주진하는 사업이 참여업체의 부적정한 회계 처리에 관련 기관 간 마찰까지 빚어져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등은 "힐링가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업체가 사업비 집행 시 증빙서류 미비, 사업규정을 위배한 부적정한 집행 등이 다수 지적돼 사업수행이 어

렵다고 판단, 참여를 중지시키고 부적정 집행 금액은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3년간 국비 6억원과 지방비 1억2000만원 등 모두 7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힐링가든사업은 지역 대표 특화작물인 화훼를 활용해 심신 치료 기능을 갖춘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광주대 산학협력단, 광주테크노파크, 화훼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현장실태조사결과 사업에 참여한 A업체는 2010년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기관인데다 전시회 재료구입에 2790만원, 관련단체 연례 설명회 1950만원, 정 보수집차 7번의 해외출장 1540여만

원 등의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전시회 참가지원 업체들에게 2790만원의 전시제료 및 기타 물품구매(납품) 등의 서명을 받았으나 실제 물품구매액수는 이보다 적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동의서에서 명한 모업체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3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명했다"며 "손에는 보지만 흥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으며 액수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힐링가든사업 사업단 관계자는 "지경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집행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잘못 사용돼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에 알려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사업 완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측은 A업체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이 없는 지출 금액은 반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애초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를 상반기 광주테크노파크로 교체되면서 사업 전반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한 만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A업체 측은 이와 관련 "회계처리가 미숙했을 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미 다 비로잡았으며 이 같은 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힐링가든사업은 지난 2010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가 결과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이 이를 신규사업으로 부상했으나 참여업체의 부적정 회계 처리, 잊은 참여기관 및 직원 교체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즐거운 성탄 스케이트

성탄절인 25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실내빙상장에서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과 가족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험 사기 가족 4명 검거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작은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자주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탄낸 김모(여·35)씨를 포함한 가족 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가족들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모두 101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39차례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김씨는 남편과 시동생, 시동생의 부인과 째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같은반 여중생 6개월간 성추행

광주서... 학교측 "전혀 몰랐다" 원스톱지원센터 신고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수개월간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측은 피해 학생 친구의 신고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는 등 생활지도에 한계를 드러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13)양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반 남학생 2~3명으로부터 교내 시청각실 등지에서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실은 A양이 같은 초등학교 출신으로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 이 친구가 학교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측으로부터 이 사건을 접수한 광주원스톱지원센터는 북부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학교도 너무 당황스러워 원스톱 지원센터에 신고했다"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 7월 이후 A양을 학교 시청각실로 불러 몸을 잡고 몸을 강제로 만졌다는 것. 또 학교 인근 공원과 상가 화장실 등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부모에게 알리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했다.

이 사실은 A양이 같은 초등학교 출

신으로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게 털어놓은 뒤 이 친구가 학교측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부모에게 알리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했다.

이 사실은 A양이 같은 초등학교 출

신으로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게 털어놓은 뒤 이 친구가 학교측에

"연평도 사건 가슴 아픈 사람 많아 조문 안된다"

정파 떠나 국민 희생 알아줘 감사

故 서정우 하사 어머니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편지

지난해 연평도 포격 당시 숨진 광주출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비상대책위 원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서 하사의 어머니는 지난 22일 'jungwoo'라는 아이디로 박

비대위원장의 공식홈페이지에

시판에 올린 '박근혜 대표의 국민

사랑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 드

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바

쁜 일정에도 연평도 포격 전사자

장례식에 참석해 애석해 하시던

그 모습, 1주기 추도식에서도 장

대비를 맞으며 추모해 줘 연평도

포격 유가족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최근 조문을 하는 게 도리라고 하

는 분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희생된 젊은 군인의 전사에 애도

를 표하거나 북한을 비난한 사람

들이 전혀 아니기에 과연 그분들이 주장한 도리라는 건 어떤 것인지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신문기사를 통해 박근

혜 대표님이 북한이 저지른 만행

에 대해 사과 해야 한다는 말씀

과 함께 공식적으로 조문을 반대

하신 내용을 읽고 진정으로 정파

를 떠나 안타까운 국민의 희생을

알아주셔서 위로 되고 감사함이

느껴지기에 글을 올린다"고 취지

를 소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김

국방위원

장 조문 논란이 일자 당회의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1년이 지

났지만 아직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 조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국회 조문단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런 문제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다르게 가서는 안 된다"며 거부했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내일침** (8467)



양과동 의료폐기장

법정공방 불가피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남구도 대응기로 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한재는 "양과동 의료폐기장에 대한 남구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재 측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남구의 건축허가로 인해 이미 투입된 100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적잖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남북 어부 간첩 사건 연루 2명 무죄

### 광주고법 유족에 사과

광주고법 재판부가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간첩 누명을 쓴 채 사망한 남북 어부와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5일 "남북 어부 간첩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사망) 및 박모(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당시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캐냈거나 북한을 친양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족이 참석한 법정

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하며 고인이 영면하기를 기원한다"고 담담히 '선배 판사'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일부 유족들은 이 부장판사의 진실을 담은 사과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 등은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각각 남북된 뒤 귀환해 살다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캐냈거나 북한을 친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3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박씨는 1973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출소 뒤 숨진 피고인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제자 성추행 전 여고 교장 징역 3년

### 광주지법 목포지원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지난 22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여고 김모(57) 전 교장(광주일보 2011년 6월 11일 6면)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신상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이 돌봐야 할 학생을 관사로 불러 성추행한 사실은 교육자로서 죄질이 매

우 불량하며 피해 여학생이 경찰 조사와 피해 보호센터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남의 모 여고 교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제자를 관사로 불러 유사행위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경찰은 "빠른 신고로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것도 좋지만 불조심하는 것은 안전의 기본이다"고 한마디.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div